우리나라 大學入試制度 변천의 性格과 意味

金 仁 會
(延世大 敎育學科)

Ⅰ. 問題의 性格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大學入試制度는 크게 7차례에 걸쳐 바뀌어 왔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의 성격으로 본다면 대학입학 예비고사제가 실시되기 시작한 1969년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다. 1969년 이전까지의 입시제도는 대학별 單獨考査制와 國家考査制가 몇 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되는 試行錯誤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69년 이후 현재까지는 국가고사제가 계속되면서 처음 10여 년간 대학별 본고사가 병행되다가 1981년부터 완전히 국가고사가 選拔考査의 기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을 좁게 볼 때에는 각급 학교 입시제도의 변천 과정 중의 한 부분으로서의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어 온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사실상 그동안 入試制度의 問題는 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입시제도만 하더라도 광복 이후부터 무려 9차례나 바뀌어 오다가 1969년 무시험 추첨제가 채택된 이후부터 비로소 정착되어 왔으니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제도적 안정을 찾은 시기가 대학 입시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대학 입시제도의 變遷史는 그 의미에 있어서나 기능에 있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83년 현재 국민학교 졸업자 중 중학으로의 진학율이 98.6%이고, 중학교 졸업자 중 고등학교 진학율이 89.4%이니, 중·고교의 입시제도 그 자체가 진학 희망자들의 교육내용이나 심리적 성숙과정에 중요한 變數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어 버렸다. 통계상으로 볼 때에 中等敎育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普通敎育의 의미를 갖게 된 셈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제도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고등학교로의 진학율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고교 졸업자들의 진학 희망율도 상승하고 있으니 실제 대학 진학 희망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고교졸업자 중 上級學校 진학율이 1982년에 37.7%, 1983년에 38.3%인데, 학력고사 응시자 전체 중에서 대입 탈락율은 1982년에 66%로 약 37만명, 1983년에 62%로 약 33만명이다. 1984년에는 약 40만명이 탈락했다. 대학 진학율이 40%를 밑도는 것은 대학교육이 보통교육일 수는 없다고 하는 논리로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比率 자체를 놓고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논쟁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脫落者의 수가 연간 3~40만명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1971년에만 해도 대입 탈락자수가 10만명 정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아마도 이 문제야말로 가장 深刻한 어려움을 안겨다 주는 난제 중의 난제일 것 같다.

대학 입시제도가 그 의미나 기능에 있어서 중등교육의 입시제도와 차원이 다른 것은 이러한 탈락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현재의 대학인구 정책 및 지난날의 우리나라 敎育政策과도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따라서 단순히 입시제도 하나만 갖고서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물론 지난날 정치·사회·역사의 변천과도 有機的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의 학원문제와도 심층적으로 관련된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성격은 물론이고 政治·社會·文化의 흐름의 성격과 그 원인까지도 조명해 볼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난관이 어떤 성질의 것일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다.

Ⅱ. 入試制度의 變遷內容과 그 性格

그러면 지난날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으며 그러한 변천의 배경 및 그와 관련되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은 크게 7차로 정리될 수 있다.

① 1945~1953년까지는 대학별 단독시험제이었다. 이때 시험과목은 거의가 국·영·수·사회생활 등 4과목이었는데, 1950년부터는 이 4과목을 필수로 하고 선택과목이 한 가지 더 부과되었다.

② 1954년에는 대학입학 國家考査와 대학별 本考査가 병행되었다. 국가고사에서는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이었다. 각 대학들이 협의하여 聯合考査를 치렀는데 이때 일부 대학들에서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입시 부정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다. 전시하에서 징집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학생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하는 일이다. 입시 탈락생들의 항의와 사회적 물의로 인해 國家考査制는 폐지되었다.

③ 1955년~1958년까지는 대학별 단독시험제이었다. 이 기간중 試驗科目은 국·영·수가 필수였고 사회생활과 과학이 학교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부과되었다. 또한 이 해에 연세대학은 내신에 의해 선발하는 무시험 전형제를 택하기도 했다.

④ 1962~1963년까지는 다시 대학입학 國家資格考査制가 실시되었다. 이때는 합격선이 점수로 결정되어 있는 자격고사 겸 선발고사의 성격이었다. 시험과목은 국·영·수·사회·과학·실업 등 필수 6과목에 계열별 선택 1과목이었다가 '63년에는 선택과목이 없어졌다.

⑤ 1964~1968년까지는 대학별 單獨試驗制가 계속되었다. 시험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령에 의거, 필수과목 위주로 결정되었다.

⑥ 1969~1980년까지 국가고사인 大學入學 豫備考査制와 대학별 본고사가 병행되었다. 예비고사에서는 1971년까지는 전국의 대학 입학정원의 150%를, 1972년부터 1973년까지 180%를, 1974년부터 1978년까지는 200%를 합격기준으로 했다. 1979년부터는 入學定員의 180%로 다시 바뀌었고, 再修生 누적 방지책으로 3수 이상자에게 감점제를 실시했다.

예비고사제도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다섯 차례 보완 내지는 변천을 겪었다. 그 중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 보면, 1973년까지는 전국 단위의 합격선을 적용했었다가 1974년부터 응시자가 2개 시·도를 지원하여 그 지역내의 정원에 따라 합격선이 결정되고 당해 지역내에 소재한 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複數 시·도 지원제로 바뀌었다. 또한 예능 및 체육계 학과 지원자나 전문학교 지원자는 예비고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이 1974년부터는 그들도 예비고사에 합격해야만 대학 本考査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예체능계 특기자에게 예비고사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74년부터는 體力檢査의 결과가 점수화되어 예비고사 총점에 가산되게 되었다. 1979년부터는 전문대학 입학에도 예비고사 합격이 필수 조건으로 되었다.

豫備考査의 筆答考査 문항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선다형으로 출제되었다. 고사과목은 1973년까지는 국·영·수·사회·과학·실업·가정 등 6개 교과이었으나 1974년부터는 체력장·국어·국민윤리 및 사회·수학·과학·실업 및 가정·국사·외국어 등 7개 교과로 되었다. 1980년 예비고사에서 고사한 교과목을 보면 한 학생에게 부과되는 시험과목이 체력검사 이외에 14개 과목이다.

예비고사와 병행 실시된 大學別 本考査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영·수 등 3개 교과목만을 고사과목으로 했다. 예능계의 경우만을 수학 대신 실기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었다.

⑦ 1981년부터 현재까지는 대학별 본고사가 없어지고 大學入學 學力考査와 內申制가 병행되어 오고 있다. 예비고사가 입학정원 비율에 따른 선발 자격고사이었는데 비해 학력고사는 資格基準 없이 시험성적만 갖고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선발고사의 성격으로 바뀐 것이다. 대학별 본고사가 없어진 대신 도입된 內申制는 50~30% 사이에서 대학의 재량에 따라 入學査定 점수에 반영토록 되었다. 학력고사제가 되면서 고사과목은 더욱 늘어나 1984년 현재 한 학생당 17개 과목을 치르도록 되었다.

이상에서 개괄해 본 내용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學生選拔을 위한 고시제도운영의 주도권이 대학으로부터 차츰 국가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대학별 단독시험제도와 국가고사제가 번갈아 실시되거나 병행되다가 1969년부터는 결정적으로 국가고사의 비중이 커지고 1981년부터는 완전히 국가고사제로 一元化된것이다.

둘째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고사과목수의 비대화 경향이 심해진 점이다.

세째는 出題方式이 주관식 논문형에서 선다형 객관식으로 바뀌어 왔다는 점이다.

끝으로 입시제도의 원칙이나 운영방법에서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가장오래 지속된 예가 1955년부터 1961년까지 7년간 계속된 대학별 단독시험제와 1969년부터 1980년까지 12년간 계속된 豫備考査 및 本考査의 병행제도이지만 그 기간중에도 실제 운영면에서는 수정·보완·개정 등의 변화가 거듭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 대학 입시제도는 중·고등학교 입시제도가 1970년대초까지 일단 정착된 다음 변함 없이 지속되어 온 것과 대조적이다.

Ⅲ. 入試制度 變遷의 意味와 背景

그러면 대학 입시제도의 變遷過程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 배경적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196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에 대해 政策的 次元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곧 대학교육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초·중등교육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뜻도 될 것이다. 1954년 한 해만 제외하고는 1945년 이후 196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大學別 單獨試驗制로 일관해 왔던 셈이다. 1962년과 '63년에 정부는 학사고사제와 함께 대학입학 국가고사제를 실시하다가 중단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입시제나 학사고사제에 보다는 大學人口 調整政策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정책의 성격은 한마디로 高等敎育에 대해 행정부가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방향은 대학인구의 팽창을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961년부터 1969년 사이에 우리나라 大學人口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대학정책은 당시 우리나라의 國民經濟 수준, 일부 사립대학의 부조리, 4·19 이후 대학이 갖기 시작한 정치적 영향력 내지는 비중의 변화, '5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어 온 전후 인구폭발 현상의 결과로 생긴 인구파고가 이동하여 '60년대초부터 초·중등교육 학령인구의 증가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생긴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책적 비중의 증대 등의 몇 가지 變數를 함께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배경 설명이 가능하다. 요약한다면 '60년대부터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政

策的 次元에서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입시제도보다는 고등교육의 규모와 운영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 강화로 시작되었고, 1969년부터는 입시제도에서 적극적인 主導權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둘째로, 일단 입시정책의 주도권을 정부가 확보한 다음부터 국가고사의 고사과목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입시 준비 교육에 치중하는 跛行的 고등학교 교육을 正常化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과목의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고사과목에 포함시키면 바로 그 과목의 교육이 강화되는 것이라는 식의 단순논리가 입시제도 운영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모든 敎科目을 고루 배우게 함으로써 전인교육을 가능케 하겠다는 식의 어설픈 교육학적 이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성적 내신제를 병행하면서 그런 이론이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 것이다.

세째로, 입시제도의 運營原則이나 실시방법에서 수정 내지 개정 또는 보완이 계속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변화가 교육학적 이론이나 哲學的 原理에 입각한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바뀌다시피 해 온 입시제도의 실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변경된 내용들은 對症療法의 단편적 보완책 내지는 臨機應變策들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입시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감을 갖게 되는 부정적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아울러 교육정책과 행정의 문제가 非專門家 官僚集團의 손에 의해서 일관성 없이 요리되고 있다고 하는 국가 교육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심을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네째로, 1981년 7·30 敎育改革措置의 일환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급증하면서 입시제도가 바뀌게 된 것은 '60년대에서 적극화된 고등교육정책의 영향이 '70년대 동안에 누적되어 온 결과 필연적으로 취해질 수밖에 없었던 변화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60년대의 대학억제정책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우선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중반에 걸쳐 생긴 人口波高가 이동하여 이때부터는 대학 입학 연령층의 증가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60년대말 '70년대초에 걸쳐 定着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결과로 상승해 온 진학율의 여파가 대학 진학 희망인구의 증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간의 經濟成長, 국민들의 생활조건의 변화가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교육열과 복합되어 고학력 지향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덧붙여서 '70년대까지의 우리 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변화의 양상이 單線的 上向지향 경쟁체제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高學力集團에 편입되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획일적 가치관이 강화되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70년대초에 7만 4천명 정도이던 대입 탈락자 인구가 '79년에는 20만을 넘었고, '80년에는 30만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70년대 중반부터의 과외열풍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 특히 고사과목의 肥大化와 경쟁율의 深化現象은 '70년대 중반부터 점차 격화되어 온 대학가의 학원소요문제와 인과적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대학가의 소요문제는 정치·경제·사회 및 인구구조 등 제반 요인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후 인구폭발로 생긴 人口波高가 대학생 연령으로까지 이동했을 때 大學街의 學生騷擾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구미제국이나 일본이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에 걸쳐 학원소요를 겪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하게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파고가 대학생 연령층을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소요는 더욱 극렬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구파고의 이동하고만 관련지어 설명할 수는 없겠다.

敎育學的 視角에서 볼 때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 특히 '81년 이후 고사과목이 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있고, 內申制가 적용되며, 모든 시험이 選多型 客觀式 방법 일변도이고, 해마다 입시 탈락자수가 3~40만 명씩 생기고 있다는 사실들이 대학생 일반의 심리적·인격

적 成熟과 思考方式 및 價値觀形成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공통 변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들은 계속적인 심리적 긴장과 좌절감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내신 등급 경쟁, 모든 교과목에 대해 입시준비를 해야만 하는 심리적·신체적 부담, 반복되는 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대한 敎育評價體制에 대한 불만과 불신, 탈락될 확율이 높다는 사실로 인한 불안 등이 고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意識과 價値觀形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춘기 후기 연령층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각종의 호기심과 정열이 制度的으로 발산을 억압 당한 채 학생들에게는 단순하고 기계적이면서도 긴장이 계속되는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 피동적으로 적응하거나 아니면 도태되어 자포자기하거나의 두 가지 길밖에는 주어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악조건을 끝까지 견뎌내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일수록 개인적으로는 보다 심하게 자기를 억압하는 생활을 경험한 셈이다.

오늘날 대학생 人口가 몇 년 사이에 3~40만명 수준에서 1백만명을 넘게 급증했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 구성원들의 성분도 그만큼 多樣化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 모두가 고교 3년간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된 심리적 억압과 불안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만은 결코 異質的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공통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양식, 즉 제도와 환경에 대한 불만, 기성의 권위와 체제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黑白論理,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의 윤리를 따지지 않는 가치관과 행동양식 등이 입시로부터 해방된 대학생들에게서 쉽사리 표면화되고 또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현재의 대학 입시제도는 본의 아니게도 고교 3년 동안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기성의 질서와 제도, 권위체제 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과 증오심을 기르도록 하는 共通要因 노릇을 해 온 셈이다.

Ⅳ. 앞으로의 課題

대학 入試制度는 사실상 대학교육은 물론 중등교육의 제도, 내용, 방법, 경쟁 등과 전반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정치는 물론 국가 장래의 발전과도 떼어 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因果關係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제도 한 가지만을 놓고 연구 검토하는 것은 대증요법을 찾는 일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는 敎育全般과의 관련 아래에서 보아야만 한다. 국방이나 경제문제가 타분야들과의 유기적 관계 아래에서 종합적 시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육문제도 국가 전체의 문제들과의 관련 아래에서 綜合的 視角으로 연구되고 조종되어야만 할 문제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문제가 국방이나 경제문제와 같은 비중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연구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 그것은 국가 정책상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 분야의 官僚集團 구성원들의 질이 높아지고 전문화되어 온 예에 비추어 볼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론을 전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대학 입시제도의 變遷에만 시각의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것을 요청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도 대학 입시제도 자체에 국한해서 제시 하기로 한다. 現行 入試制度가 지닌 문제점들은 앞에서 이미 거론된 셈이지만 이를 다시 정리하면 앞으로의 과제들이 따라서 제시될 수 있다.

① 고사과목수를 늘려 온 결과는 한마디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없는 일이지만 사족삼아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國民倫理 과목이 고사과목으로 채택된 이후부터 오히려 입시에 합격한 대학생들에게서 국민윤리교육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성향은 심해져 왔다. 고사과목수를 줄이고 내신 내신제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內申 總點 判定制의 모순이 개선되어야 한

다. 이는 입학전형에서 대학 재량권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즉 지망학과나 전공의 성격에 따라 내신성적 중 과목별 성적에 대한 配點比率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총점 판정제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어에 낙제한 학생이라도 수학점수가 높기 때문에 국문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③ 選擇型 문항 일변도의 출제원칙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택형이 논술형으로 바뀌는 식의 급작스러운 전환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처음에는 單答型 문항이 병행되다가 차츰 論述型 문항의 비중이 늘어나는 식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자칫하면 高等學校 敎育에 새로운 부담과 혼란만을 가중시킬 위험 부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④ 大學別 入學銓衡의 裁量權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본고사제도의 부활로 환원하는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명목상으로라도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면접 口述考査 점수가 전체 점수의 몇 % 수준에서라도 가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⑤ 考査科目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시험시간이 길어질 필요가 있다. 3년간의 학업결과를 단 하루에 그것도 과목당 적으면 15개 문항, 많아야 50개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떤 교육학적 이론으로도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과목당 시험시간이 적어도 2시간 이상되어야 하고 고사일이 적어도 2일이 되어야 마땅하다.

⑥ 따라서 學力考査出題 作業期間도 현재의 1개월로는 부족하다. 국가고사출제를 장기적으로 전담 연구하는 기관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게 위촉하여 수 개월 또는 수 년에 걸친 문제 제작과정이 필요하다.

⑦ 장기적으로는 學力考査는 정상적인 고교교육을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국가자격고사로 전환되고 대학이 입학전형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야 할 것이다. 內申制와 口述試驗만으로 전형하건 따로이 본고사를 치르건 전형방법의 선택은 대학측에 맡겨야 옳다.

단지 이렇게 될 경우 '70년대와 같은 과외열풍이 다시 일거나 일부 대학에서의 입시 부조리 현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學生選拔權이 대학에 주어져서 결국에는 대학간의 자유경쟁 체제가 강화되어 교육의 질이 높은 대학들은 성장하고 不實大學들은 도태되며, 질 높은 대학일수록 입학은 쉽고 진급과 졸업은 어렵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질 높은 高級人力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입학이 쉽고 졸업이 힘들게 되어야만 고등학교에서도 入試準備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만약에 현재와 같은 대학 입시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고교교육은 물론 대학교육의 질이 向上될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에서의 소요가 계속됨은 물론이고 현재와 같은 跛行的 大學文化 자체가 더욱 악화될 위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적으로는 사회발전, 정치적 안정, 경제성장, 국제 경쟁력 신장 등 국력과 직결되는 거의 전반적인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전망된다. ※